

2021 국가직 9급 행정학(나책형) 해설 (2021.04.17. 시행)

공단기 행정학 전임 김만희 교수

<마니쌤 총평>

2021년 국가직 9급 시험을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의 영역별 출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론	정책론	조직론	인사 행정	재무 행정	한류	지방 행정
5	3	4	2	3	1	2

전체적 난이도에서는 평년의 국가직 9급 수준에서 출제되었지만, 문제의 세부 지문에서 3~4개의 문항은 난이도가 좀 더 심화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문제 경향으로는 총론에서도 신공공서비스론, 공공봉사동기이론 등 최신이론을 문제화하고 있고, 재무행정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지문적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개념형(네트워크 조직 등), 사례 적용형 문제(외부통제)는 기본적인 사항에서 해결 가능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정학을 단순 유형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예산주기모형 문제).

총평하자면, 행정학은 이제 단순 암기보다는 행정학적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전공과목화 되어 가는 과도기의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니행정학의 강의에서 강조한 바대로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고, 제대로 행정학다운 학습을 한다면 대비가 충분했던 시험이라고 평가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험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시험은 타산지석의 자료로 삼아 지방, 서울시 시험에 대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김만희 드림

문 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효과 발생
- ② 시장의 독점 상태
- ③ X-비효율성 발생
-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36~38

<정밀해설>

③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①, ②, ④ 외부효과 발생, 시장의 독점상태, 공공재의 존재는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 비교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 • 정보의 비대칭성 •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불안전경쟁 및 자연독점	• 파생적 외부효과 • 권력의 편재 • 정보의 불충분성 • 정부조직의 내부성 • X-비효율성

문 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410

<정밀해설>

- ④ 조직목표는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서 기능한다.
- ① 조직목표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 ② 조직목표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③ 조직목표는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나아갈 방향을 설정·제시한다.

문 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 ① 태스크 포스
- ② 프로젝트 팀
- ③ 네트워크 조직
- ④ 매트릭스 조직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463

<정밀해설>

③ 네트워크조직은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위주로만 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아웃소싱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이다.

- ① 태스크 포스는 여러 집단에서 차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일시적·임시적 조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나면 해체되는 조직형태이다.
- ② 프로젝트 팀은 집단 간 통합과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장기간 강력한 협동이 요구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 ④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형태이다.

문 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ㄴ. 국회의 국정조사
-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① ㄱ, ㄷ, ㅁ, ㅅ
- ② ㄴ, ㄷ, ㄹ, ㅁ
- ③ ㄴ, ㄹ, ㅁ, ㅇ
- ④ ㄴ, ㄹ, ㅂ, ㅇ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304~306

<정밀해설>

④ L, R, B, O이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L. [O]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통제로 외부공식통제이다.

R. [O]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사법통제로 외부공식통제이다.

B. [O]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는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로 외부비공식통제이다.

O. [O]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는 언론에 의한 통제로 외부비공식통제이다.

G, C. [X]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은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로 내부공식통제이다.

M, S. [X]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는 내부공식통제이다.

▶ 통제주체에 따른 분류: 내부통제와 외부통제(Gilbert)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계층제(상관)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의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 •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에 의한 통제 • 대표관료제 • 내부고발자보호제 • 공무원노조, 공익, 비공식집단, 행정문화	• 민중통제 • 시민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 정당에 의한 통제

문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359

<정밀해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동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

동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동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문 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근접효과와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와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92~93

<정밀해설>

③ 분포상의 오류인 관대화 경향은 강제배분법을 사용해 방지할 수 있다.

문 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절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113~115

<정밀해설>

② 과학적관리론에서 조직 내의 인간은 물질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하였다. 한편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 과학적 관리론 vs 인간관계론

구분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인간관	• 합리적·경제적 인간(X이론) • 경제적, 물질적 욕구	• 사회적·동태적 인간관(Y이론) • 비경제적, 사회적 욕구
조직관	• 합리적, 기계적 조직으로 파악 • 공식구조 중시	• 비공식 구조 중시 (공식구조와의 조화)
인간관리	• 기계적 관리(개인주의) • 지위와 권한을 중시하는 권 위적 리더십 • 하향적 의사전달 • 직무중심의 과학적 원리를 강 조 • 직무중심의 성과급	• 인간적, 민주적 관리 (협동주의, 집단주의) • 참여와 동기부여를 중시하는 민 주적 리더십 • 상향적 의사전달 • 과학적 원리는 중시하지 않음 • 인간중심의 생활급
능률	투입 대 산출의 기계적 능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능률
행정이념	능률성	민주성

문 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154

<정밀해설>

- ①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한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결과(효율성, 생산성),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과정(신뢰, 민주성 등)이다.
- ④ 신공공관리의 관리 기구는 시장,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서비스연계망이다.

▶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대응성, 신뢰)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문 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관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172~174

<정밀해설>

- ② ㄱ, ㄷ, ㅁ이 옳은 내용이다.
- ㄱ [O]. 규제정책은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 ㄷ [O].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급대립적 성격의 정책이다.
- ㅁ [O].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대내적인 정책으로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선거구 조정 등이 있다.
- ㄴ [X].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은 모두 재분배정책의 사례이다.
- ㄹ [X].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정책의 사례이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분배정책의 사례이다.

▶ Lowi의 정책유형 비교

유형	의의	특징	예
분배정책	공공서비스 편익 배분	포크배럴, 로그롤링, 갈등 없음	택지분양, 사회간접자본, 보조금 등
규제정책	활동에 제한을 가함	다원주의 (포획, 지대추구)	진입규제, 독과점 규제
재분배정책	소득 이전 목적	수직적 형평성	노령연금, 임대주택 등 사회보장정책
구성정책	체제의 구성과 운영	게임의 법칙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획정

문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최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정답 : ③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201~202

<정밀해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모든 예산이 아닌 헌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있는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헌법 제54조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문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 ② 품위 유지의 의무
- ③ 복종의 의무
- ④ 성실 의무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154

<정밀해설>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②, ③, ④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성실 의무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한다.

문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230, 234, 237, 246

<정밀해설>

- ④ 예산주기는 편성(FY-1)→심의(FY-1)→집행(FY)→회계감사 및 결산(FY+1)에 이르는 과정으로 3년이 된다.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는 다음 회계연도 5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는 2022년에 볼 수 있다.
① 예산요구서는 매년 5월 2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작성은 2021년에 이루어진다.
② 예산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을 볼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021년에 볼 수 있다.

문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201

<정밀해설>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문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393

<정밀해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문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④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336~337, 343, 345

<정밀해설>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한편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에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문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정답 : ①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301~302

<정밀해설>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는 도구요인으로 이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는 표본의 대표성 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는 호손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경우는 크리밍 효과로, 이는 외적·내적 타당성 모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문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2권 p.440~441

<정밀해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서명인 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문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155~157

<정밀해설>

-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궁극적 목적으로 보며,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담론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본다.

문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

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정답 : ②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239~241

<정밀해설>

- ② ㄱ, ㄹ이 옳은 내용이다.

ㄱ [O]. 할인율은 미래에 투입될 비용이나 발생할 편익을 현재가치로 표시하기 위한 교환비율로, 할인율이 높을 때에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ㄹ [O].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아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ㄴ [X].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포함하며, 매몰비용만 제외한다.

ㄷ [X].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것으로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문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페리와 와이스(Perry&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정답 : ④

<적중 페이지, 출제근거> 2021 마니행정학 1권 p.342

<정밀해설>

- ④ 페리와 와이스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서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① 공공봉사동기이론에서는 관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고유한 직업동기인 공직동기가 존재한다고 본다.

② 공공봉사동기이론은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으로 구성된다.

③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공봉사동기이론(PSM)의 구성

합리적 차원	공직자의 효용극대화는 사익추구가 아니라 적극적 정책참여를 통해 사회적 효용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호감도, 특정한 이해관계지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
정서적 차원	국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적극적 표현으로 나타남 → 선의의 애국심,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몰입 등의 정서적 차원
규범적 차원	공익에 대한 봉사와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특징으로 함 → 공익에 대한 봉사요구, 의무감, 정부전체에 대한 충성도, 사회적 형평 등